

민주, 민생 이슈 발굴·입법 드라이브... 대안 야당 주력

난방비 추경 편성·전세사기 피해자 사후 지원 등 대책·해법 제시 소상공인·농어민위원회 출범...민생 입법 본회의 직회부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피부로 체감되는 경제 지표가 심각하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무능을 부각하는 데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 전세사기 피해와 같이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이슈도 당 차원에서 적극 발굴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정부 무능을 부각하는 동시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책과 해법을 제시하며 '대안 야당' 면모를 알리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사후 구제'를 위한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조만간 당내 소상공인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한다. 모두 민생 이슈와 연결된 당내 기구이다.

당은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생이 걸린 법안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로 직회부돼 상정을 앞두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

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여당과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내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과제다.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 대표 기소로 이어질 경우 당 내분이 가시화할 수 있다.

다음 달 초에는 공직선거법 협의와 관련한 재판 출석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최근 비명(비이재명)계까지 포용하는 당 내부 결속이 주력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검찰 출석 때 '사당화' 논란 차단을 위해 의원들에게 동행 금지령을 내린 것이나,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중단을 공개 요청한 것도 당의 단일대오 강화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는 최근 당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 총선 준비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당의 분열을 일으키고, 단합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표 등가성·대표성 확대로 국민 위한 정치개혁 앞장”

민주당 광주시당 정개특위-광주 국회의원 간담회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한 자리에 모여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등 확대에 역점을 두는 등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동남읍) 위원장을 비롯한 윤영덕(동남갑)·송갑석(서구갑)·조오섭(북구 갑)·이형석(북구 을)·이용빈(광산갑)·김경만(비례) 국회의원들과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민형배·양항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광주시당 정개특위 위원 등도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지병근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균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 하며, 여·야가 합의하는 수준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표의 등가성 원칙 훼손,

승자독식 정치문화, 비례대표제의 폐쇄성, 의석수와 보좌진 부족 문제 등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없애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을 확인하고 믿음을 살피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등 공론화 작업을 거쳐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영덕 의원은 "정치개혁 범위를 선거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정당과 의회개혁을 포함한 개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부족과 갈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등 여러 담론을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선거제도와 관련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면서 "여유 있게 여러 안을 만들면서 광주시민의 공론화 과정

을 거치고 그 안을 중앙당에 제안하는 형태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빈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정치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항자 의원은 "선거제도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민형배 의원은 "기득권 정치에 부합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대표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강은미 의원은 "시민들은 정치개혁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각 정당과 의원들이 이익을 내려놓고 올바른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개특위 논의 사항과 광주시민 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2월 중 민주당 중앙당 및 국회 정개특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못 덮어... 특권의 고리 밟힐 것”

정의당은 12일 "곽상도(전 의원)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임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너지는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상식 없는 검찰과 사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그와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를 명명백백히 밝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 특권층이 더는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늦어지지 않게 조속히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 공분이 있는 만큼 저희가 이끌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 대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김건희 특검'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을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려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구상 중이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속도 내나

정무위, 27일 입법 현안 논의

테라·루나 사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다.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은 총 17개에 달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은 2021년 11월 공청회 개최로 본격화되는 듯했지만, 같은 달 법안소위에서 한두 차례 안건으로 다뤄진 후 1년 넘게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사이 지난해 5월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연이어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지난해 11월 말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1년 만에 가상자산 법안이 상정됐지만 기대와 달리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후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법안 검토 기회는 뒤로 미뤄졌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역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여야 정무위원 다수가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상가매매 (상무지구.유형적합) (임대가능)

- ▶ 중심 상업지구
- ▶ 유형가능 (전용 100평)
- ▶ 시세 - 10억
- ▶ 급매 - 7억 (융4억)

(보4천, 월수익 400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010-2614-9801